

야권 주도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贊 182명·反 91명...與 김상욱 찬성 尹·김여사 여론조사개입 의혹 수사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 통과 풍력 사업 인허가 간소화 등 답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부결키로 했으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친한계(친한동

흔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또한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명씨와 김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게 된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김상욱 의원은 부결 당론에는 나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찬성 표결에 대해 "며칠 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 목소리가 공개됐는데 그 녹취록상 명백하게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거기에 대한 수사나 이후 진행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리스크는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정정당당히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첨단전략 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른바 '에너지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동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에 여야가 공감한 바 있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협의과정에서 '원전 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로 조정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형배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본회의 원안 통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사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에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 10 조 제 4 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에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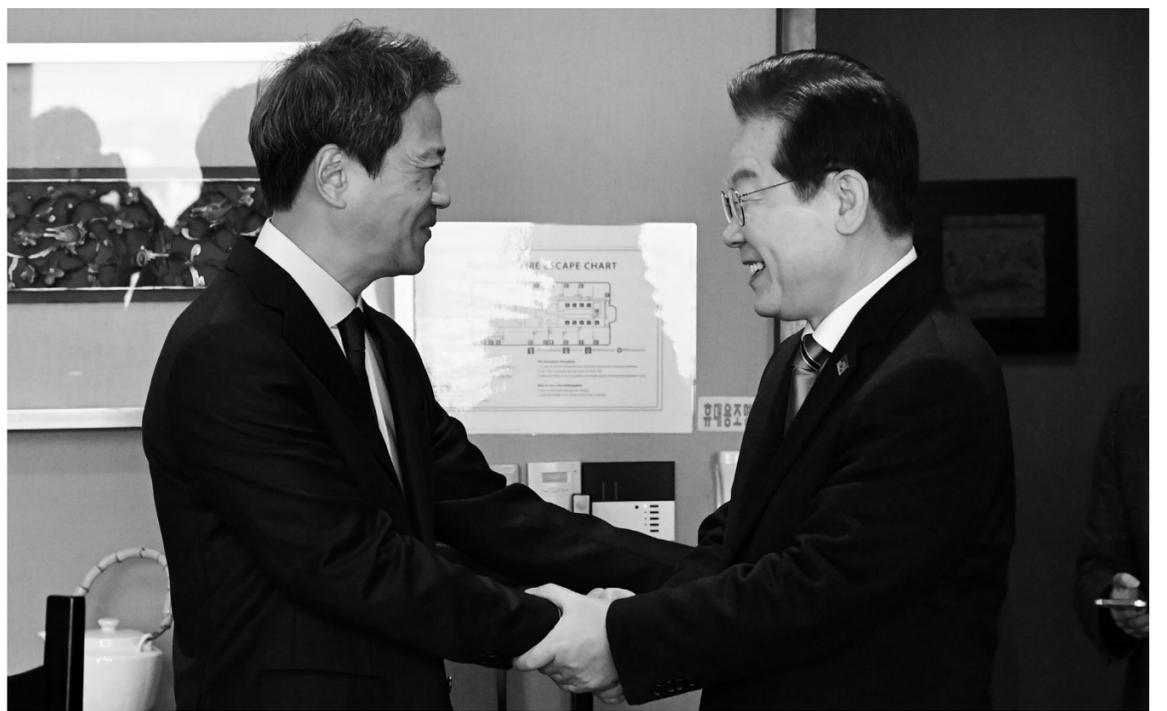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 예산으로 2025년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 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 의원은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 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라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7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다양성 보장돼야"...임종석 "연합정치 필요"

"힘 합쳐 정권교체 이뤄내는데 공감"李, 오늘 김동연과 회동...통합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힘을 합쳐 온전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와 임 전 실장의 오찬 회동이 끝난 뒤 기자회견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이날 비공개 회동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온전한 정권 교체가 필요할 때"라고 언급했고 이들은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 대표는 "(우리의) 본질은, 뿌리는 하나"라며 "(영역) 확장을 위해 격렬한 논쟁이 필요하고 우리 둘이 힘을 합쳐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입법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광역 교통망 건설 등을 위한 법률안 재정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임 전 실장 요구에는 이 대표가

"자치와 분권은 이 시대의 핵심적 과제"라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전 실장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거론하며 "막판에 가면 선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표는 "공감한다. 결코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은 "통합이 담대하게 이뤄져야 하고 헌법 개정 등 연합 정치 논의 위한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에 집중할 때이지만 이 제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임 전 실장에게 "헌법 질서를 무시한다든지 법치를 부정한다든지 (하는) 파괴적 폭동 행위가 일상이 되니까 매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며 "거기에 우리 실장님이 하실 역할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보수·진보, 좌파·우파는 다음 얘기이고 정상적인,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지 않나"라며 "(정당은) 단단하면서도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중심성을 잃지 않으면서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의 집권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온전한 정권 교체가 돼야 비로소 나라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며 "앞으로도 저는 대표께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양당 구조에서의 대통령제가 무한 대립 정치를 계속 반복하지 않나 걱정하시는 것 같다"며 "좀 더 다양성에 기반한 연합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고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방 분권,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와 철학을 재정립해달라는 요청도 이 대표에게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시작으로, 이날 21일과 24일 박용진 전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회동을 이어가면서 당내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튿날인 오는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군택 "출입국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 본회의 통과"

박군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근로기준법상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 상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제 22대 국회 임기의 첫 입법 성과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각별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